

# 병원에 시험장 마련... 당일 증상 따라 분류해 시험

## 코로나시대 '방역 수능' <중>교육·방역 당국 대책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학생 확진자 증가세에 이어, 광주에서 첫 교내 감염까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지지 않아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도 교육청도 촉각을 곤두 세우는 한편 안전한 수능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안전한 수능 시험을 위해 시험장도 일반시험장·별도시험장·병원시험장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고교 3학년생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빗고을 전남대병원에 4인용 병실 2개 등 8개 병상을 준비한 상황이다.

수험생 안전을 위한 수험장 책상 가림막 설치에 들어갔다. 시험장 책상에 설치하는 가림막은 반투명 아크릴 재질로, 책상 전면부에만 설치한다.

앞서 시 교육청은 수능 시험장 가림막 책상 영상을 제작, 자체 유튜브에 게시했다. 수험생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사전 공개를 통해 낯선 시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또 지역 내 입시학원들의 방역 상태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수능 시험일 다음날인 오는 12월 4일에는 시험장 특별 방역에 나설 계획이다. 대규모 인원이 찾는 시험장에 대한 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별 방역 당일 필수 요원을 제외한 모든 교직원도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 교육청은 수능을 앞두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생활방역 수칙 철저 준수, 다중 이용시설

최근 학생 확진자 잇단 발생 비상 시험장 책상마다 아크릴 가림막 반드시 집에서 마무리 학습을 불안 글물... 위생수칙 준수 당부

·소모임·전인적 간 교류의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이미 고교 3학년생 확진자가 3명 발생한 전남은 더욱 세심한 대책을 세웠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목포와 순천에서 고 3 수험생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병원(목포의료원 2명, 순천의료원 1명)에서 치료 중이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42명의 수험생들이 격리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능 전까지 완치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목포의료원과 순천의료원에 마련된 시험병상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목포의료원에 3개 병상, 순천의료원에 2인실(2개)과 3인실(2개) 등 4개 병상, 강진의료원에 1인실 3개 등 총 10개의 시험병상이 준비돼 있다. 만약 이들이 수능 전에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한다면 치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일반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보게 된다.

도 교육청은 남은 기간 수험생이 확진이나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연락해서 시험장 안내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도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원격 수업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원격 전환을 하지 않는 입시학원은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당국은 과도한 우려와 불안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며 학원 대면수업 자제와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수험생 스스로 안전을 지켜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올해는 안전한 수능을 위해 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6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덕고등학교에서 수능 고사장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한 시험장 방역 수칙과 준수 사항이 새로 추가됐다"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 이전 유의사항은 접촉하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는 것은 금물이며, 전국의 모든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만큼 수험생들은 안전한 가정에서 마무리 학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코로나 덮친 교도소... 재판 파행 현실화

### 피고인 출석 못해 줄줄이 연기 광주지법, 가족들에 유감 표명

"교도소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선고 일정이 늦어지는 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26일 오전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20개의 선고 재판을 듣기 위해 오전부터 법원을 찾은 사건 관련자들이 가족·지인 등 30여명들이 앉아있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로 구속된 피고인들 면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부가 구속기한 만료, 공소시효 임박 등을 고려해 교도소 선고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했지만 교도소측과 협의,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이날 20개 사건의 선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모든 선고를 미뤘다.

재판부는 구속된 채 1심을 끝내고 항소심 선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가족·지인들을 감안한 듯 "어제 오후 늦게 교도소측 연락을 받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가족들에게 통보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변호사들을 통해 연락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재판부로부터 직접 듣는

게 내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린다"며 선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2주 이상 기다려야해 언제 선고할 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도소측이 결과를 안내하는 대로 조속히 재판 기일을 지정해 선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재판 일정이 연기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교도소측의 코로나 19 확진에 따른 수형자 전수조사로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출석이 불가능해 관련 재판 일정을 조정해 진행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교도소측은 2462명(직원 468명, 수형자 1994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이 기간 외부 이동이 전면 통제되면서 재판 출석, 변호인 접견, 면회 등도 금지된 상태다. 현재 1800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지만 나머지 662명은 26일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피고인들의 재판 출석이 불가능해지면서 재판 선고와 공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 1부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모든 선고·공판을 미뤘고 형사 9단독 재판부도 지산주택조합 관련 재판을 늦췄다. 기아차 취업사기 재판도 25일로 예정됐다가 코로나로 인해 다음달로 늦춰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두환 선고재판 중계·촬영 불허...국민 눈높이 못 미친 재판부

### "공공의 이익에 부합 인정 어렵다" 5월 단체·시민단체 등 반발

법원이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요청을 불허했다. 선고 전 법정 사진·영상 촬영도 허락하지 않았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법부의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광주전남사진기자협회 등이 재판 중계와 선고 전 법정 촬영을 요청한 것과 관련,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답변했다.

법원 측은 피고인 동기가 없고 불구속 상태로 1심이 진행 중으로 촬영을 허가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법정방정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

의 동기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5월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5·18이 한국민주주의의 상징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핵심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에서 심리중인 헬기 사격 여부가 진상 규명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점, 5·18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전향한 왜곡·편향을 중단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 등을 간고했다.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민주당 조오섭·이형석 의원 등도 5·18에 대한 전사의 책임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이나 선고 시 언론에 그 모습을 공개해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했던 전례와는 사뭇 다른 점도 지적되고 있다. 헌정사상 형사 법정에 선 역대 대통령은 총 4명으로, 모두 사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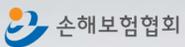
나 영상으로 기록돼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반란과 5·18 내란 살인 및 뇌물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 탄핵 재판은 생중계됐다.

박재만 참여자치21사무국장은 "재판부가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판결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고 공익적 의미를 편협하게 잘못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김영훈 5·18유족회장도 "오월 단체 뿐 아니라 광주 전체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보면 재판부의 선고내용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